

본 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초청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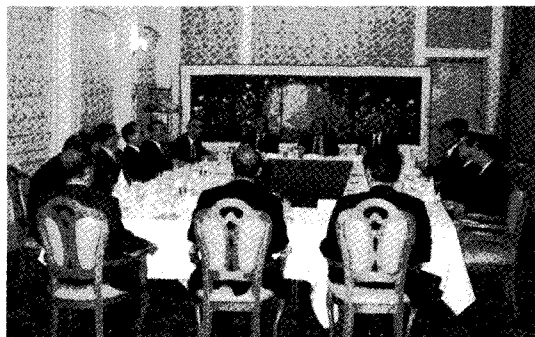
— 신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

본 협회는 지난 4월 14일(화) 팔레스호텔 12층 코스모스 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윤철(田允喆) 위원장을 초청, 「신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과 이강우(李康雨) 부위원장, 김 용(金勇) 사무처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주요간부 5명이 참석하였으며, 본 협회 이양순(李良淳) 회장 및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 등 경제3단체 부회장, 현대그룹 박세용 사장 등 5대그룹 사장과 케드콤의 김영수 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 3명 등 협회 임원진 12명이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분야가 일차적인 개혁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난 '98년 2월 6일 대통령 당선자와 합의된 원칙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해 오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해소 및 금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결합채무제표의 조기도입 및 기업의 인수·합병의 원활화에 기본원칙을 두고 추진하되 금융부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지난 '98년 3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은행장을 소집하여 과다중복지급보증을 해소하고, 한 개 계열사에서 중복 보증된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조기해소를 당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선단식 경영방법을 선호하여 이러한 경영방법을 통해 경제를 키워온 장점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력기업에 핵심역량을 길러나가야 하며, 지주회사의 허용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의 해소 없이는 지주회사 허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한편, 협회측과 업계 임원진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관계부처마다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을 제각기 발표하여 때에 따라서는 혼선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위원회측에 전달했다. 또한 보다 비효율적인 금융기관이 재무개선 등 대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국내부실기업을 외국인들에게는 매각하는 반면, 내국인에게는 매각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지주회사의 허용에 관해서 결합채무제표의 작성 등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지주회사의 제한적인 허용이 바람직하고, 계열분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0대 그룹에게도 수출무역금융혜택을 주어야 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금이 어음제도 개선의 적기이므로 이의 개선방향이 빨리 수립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신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호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